정년연장?… 車노조 노림수는 따로 있다

현대차·기아·한국GM 노조… 10만명 청원운동
MZ세대 곧장 반대 청원… "노조 그늘에 가려진 인력 적체가 원인"
속내는 전기차發 고용 불안… 생산인력 20~30% 덜 필요
"노동 경직성 계속 부딪치면 국내공장 유지나 확대 불가능"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자동차 업계가 들끓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은퇴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0만명 입법청원 운동까지 나서면서 사회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역풍도 만만치 않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 악화로 직결될 것이란 이유로 세대 갈등 조짐마저 보인다.

일각에선 노조가 임금 인상과 기존 일자리 유지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정년연장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4일부터 정년연장을 위한 국회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아와 한국GM 노조까지 가세했다.

이들은 "정년연장 법제화로 노사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장을 그만두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나타나는 소득 틈(크레바스)을 정부가 메워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14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년연장 법제화 요구는 22일 기준 1만3621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청년 실업 문제를 이유로 정년연장을 거부할 순 없다"며 "청년 고용은 정부와 경영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와 기아, 한국GM 노조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를 목표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곧장 반대 움직임도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완성차 3사의 정년연장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MZ세대라고 밝힌 청원인은 "기업은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변화에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정년연장은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와 성과 부족 등의 문제는 노조 그늘에 가려진 인력의 적체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정년연장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가뜩이나 꼬여있는 현대차 등 완성차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버거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자리 문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車 노조들이 정년연장 법제화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이유는 뭘까. 대개의 전문가들은 노림수가 따로 있다는 지적을 한다.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 처우 개선은 해마다 반복되는 화두였기 때문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사업 구조 전환을 앞두고 잉여인력 발생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압박용' 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처럼 들어가는 엔진, 변속기 등이 없다. 모두 배터리와 전기 모터로 대체한다. 1만3000여 개에 달하는 엔진 부품이 사라지게 되므로 일감과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사업 체제가 전기차로 바뀌면 생산인력은 지금보다 20~30% 덜 필요하다. 최소 7000여 명이 넘는 잉여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기술직의 5분의 1 수준에 달한다.

노조는 이 같은 배경과 전기차발 고용 충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 노조는 지난해 전기차의 주요 부품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현대모비스의 공장 신설에도 정면으로 반발하며 "전기차 부품을 직접 만들게 해달라"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 사진=현대차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미국에 5년간 74억달러(약 8조4000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해외투자를 확대하면 할수록 일감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연초 생산 라인에 투입할 인원 수(맨아워) 문제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양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전기차 양산에 따른 인력 감축과 그 갈등을 아이오닉 5를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현대차는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을 못 이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와 노동 경직성이 계속 부딪치면 국내서 공장을 유지하거나 확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미국 등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상재 기자 sangjae0212@newdailybiz.co.kr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2021 Print & Publishing Bronze Lion Campaign

Title: SIXTIES 60년대
Client: MCDONALD'S 맥도날드
Agency: LEO BURNETT LONDON 레오버넷 런던
Product: MCDONALD'S 맥도날드

Copy: 매장으로 직접 올 수 없다면, 맥도날드가 찾아가겠습니다.

'홍길동' 작성 해체계획서 사라진다

국힘 김은혜 "안전전문가만 해체계획서 작성"
무소속 송언석 "현장상주 감리제 도입"
與野, 광주 붕괴참사 방지법 '앞다퉈' 발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유명무실한 해체계획서 작성과 현장 감리 부실을 방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처벌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건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때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체계획서란 건물이나 기기 등의 해체작업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정리한 문서를 말한다.

대형기기 등의 해체작업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해체 공법과 절차 등을 적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허가권자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벌이도록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체계획서 작성을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할 수 있게 범위를 한정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작성자 서명날인을 의무화했다.

처벌 조항도 강화했다. 안전관리대책과 해체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3~15년의 징역이나 3000만~1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광주 참사(학동 4구역 철거지구)의 경우 10동 중 9동의 해체계획서 측정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고, 날씨·온도는 기상청 자료와 터무니없이 차이 나는 등 엉터리 기입 의혹이 불거진 상태"라고 부연했다.

국토위 소속 송언석(무소속) 의원도 이날 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공사 기간에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 현장. 사진=시장경제DB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체계획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발생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광주가 지역구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도 개선에 합류했다.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는 건물해체공사 관리자와 작업자, 감리자 등이 법을 어겨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을 담았다.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내수강소·중견 50개 기업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산업부,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클럽' 출범식
해외마케팅, 인프라활용 등 全주기 지원

수출경험이 부족한 내수 중견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코트라(KOTRA)와 내수 중소·중견 50개 기업이 참여한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클럽' 출범식을 가졌다.

산업부는 올해 처음 선정된 50개 내수 강소·중견기업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선정,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에 '내수중견' 전용트랙을 신설했고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중심으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이룰 계획이다.

또한 내수중견 전용트랙을 신설해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클럽을 중심으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사에서는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내수기업의 해외진출 개척 포부 발표와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사업 업무 협약서도 체결했다. 세계 4위 규모의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인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한국법인과 국내 유망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 간 핀 포인트 상담을 지원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시장경제DB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강소·중견기업은 우리 산업의 허리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강소·중견기업이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확대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정부도 해외마케팅, 수출 네트워크·인프라 활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newdailybiz.co.kr